

2017 국정감사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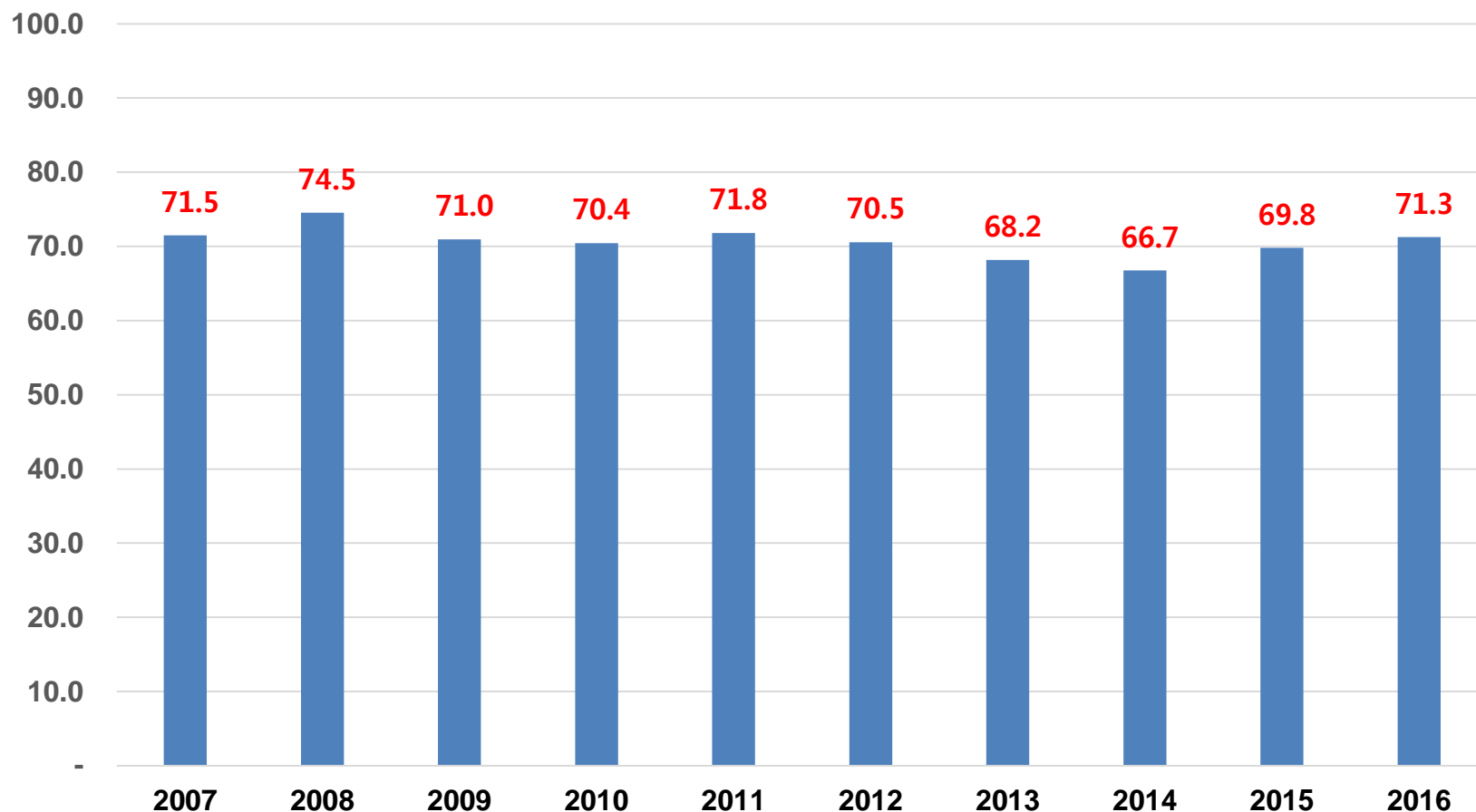
2016~2017년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단위:조원)

연도	본예산 세입예산 (A)	추경 세입예산 (B)	최종세입 (C)	최종세입 -세입예산 (C-A)	최종세입 -세입예산 (C-B)
2016년	222.9	232.7 (+9.8)	242.6	19.7	9.9
2017년	242.3	251.1 (+8.8)	8월현재 전년대비 +17.1조원 (189.5조원)	-	-
2018년	268.2				

지난 10년간 8월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

◆ 매년 큰 차이 없음 ▶ 10년간 평균 70.6%



8월 진도율 감안, 금년도 국세수입 전망

◆ 지난 10년간 8월 국세수입 진도율 기준

- 189.5조원(8월 국세수입) × 1.42(1 ÷ 70.6%) = 269.1조원

◆ 지난 해(2016년) 8월 국세수입 진도율 기준

- 189.5조원(8월 국세수입) × 1.40(1 ÷ 71.3%) = 265.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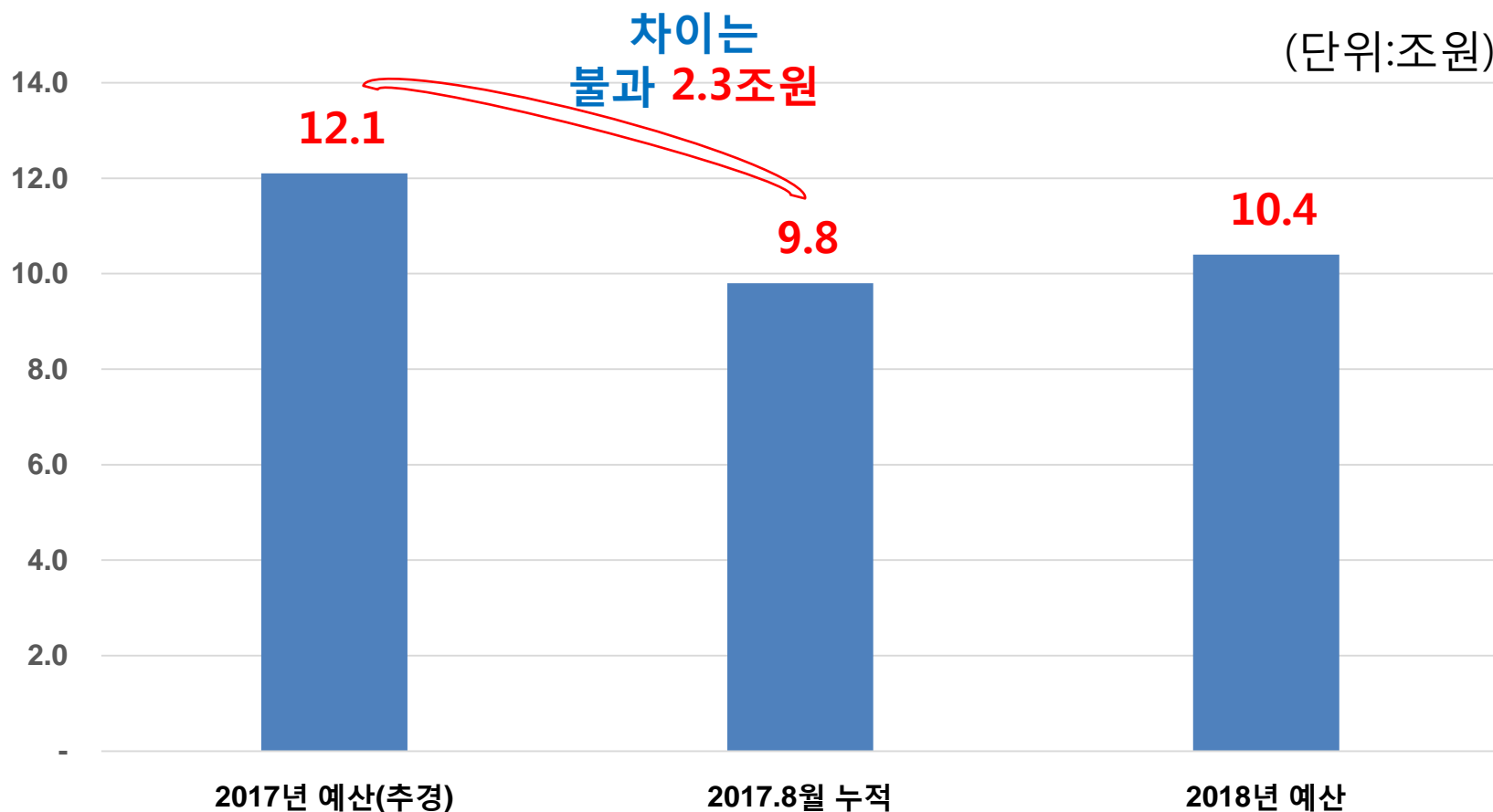
엄청난 초과세수, 정부만 나홀로 호황

(8월 기준 국세수입, 작년 8월 대비 17.1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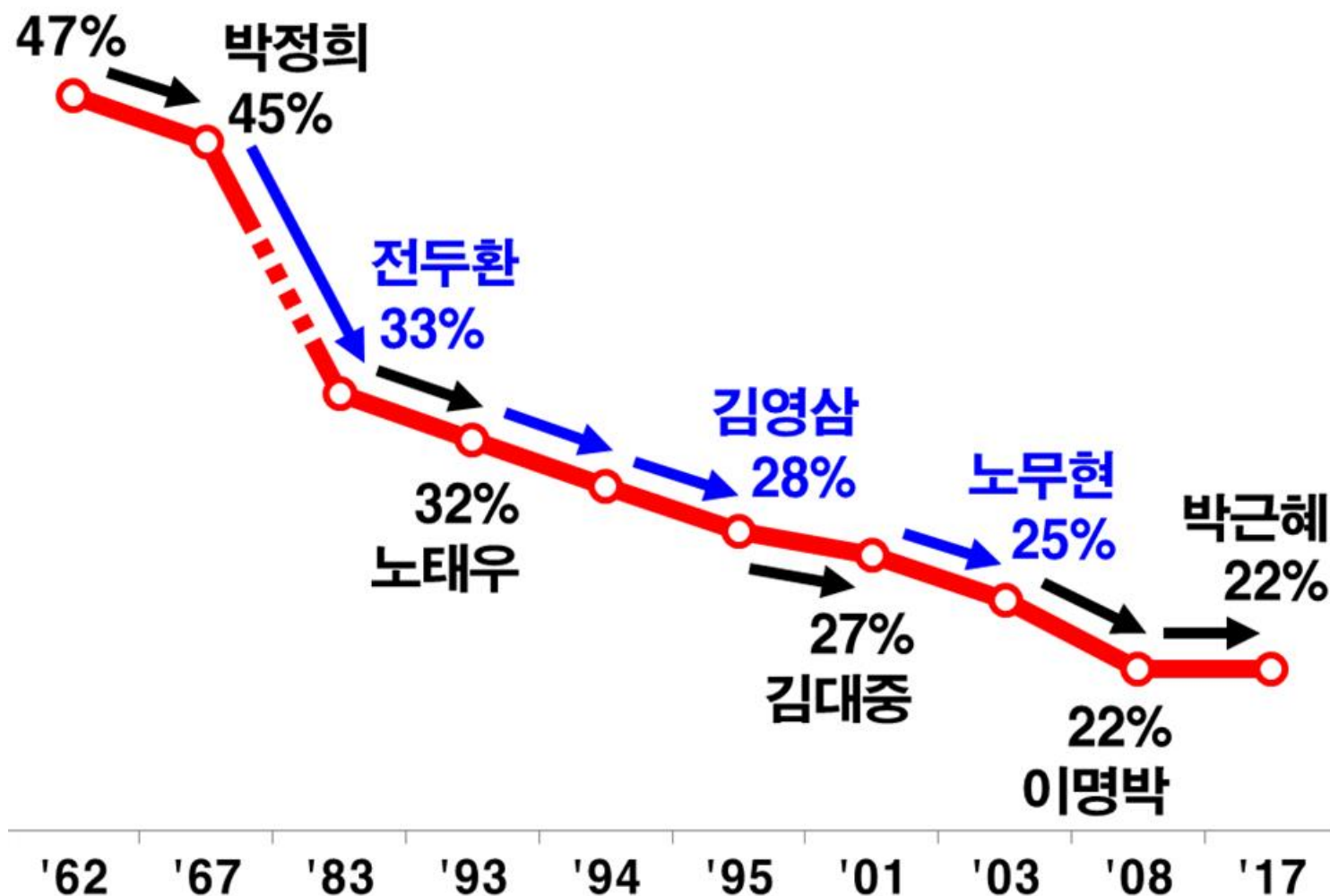
▷ 문재인정부 증세 명분 사라져,
증세 추진 철회해야

양도소득세 세수 차이

◆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해도, 전체 국세수입 영향 크게 없을 듯



역대 대통령 모두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상 부적절하다 (기재부, 2016년)

- ◆ 경기활성화에 배치
- ◆ 국제적 조세경쟁력 저하
- ◆ 대기업 실효세율 상승
- ◆ 법인세수 증가 추세

법인세율 인상 효과 (조세연구원)

◆ 2015년 4월 발표 연구결과

최고세율 1%p 인상시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

◆ 2015년 9월 발표 연구결과

법인세 세수는 세율인상시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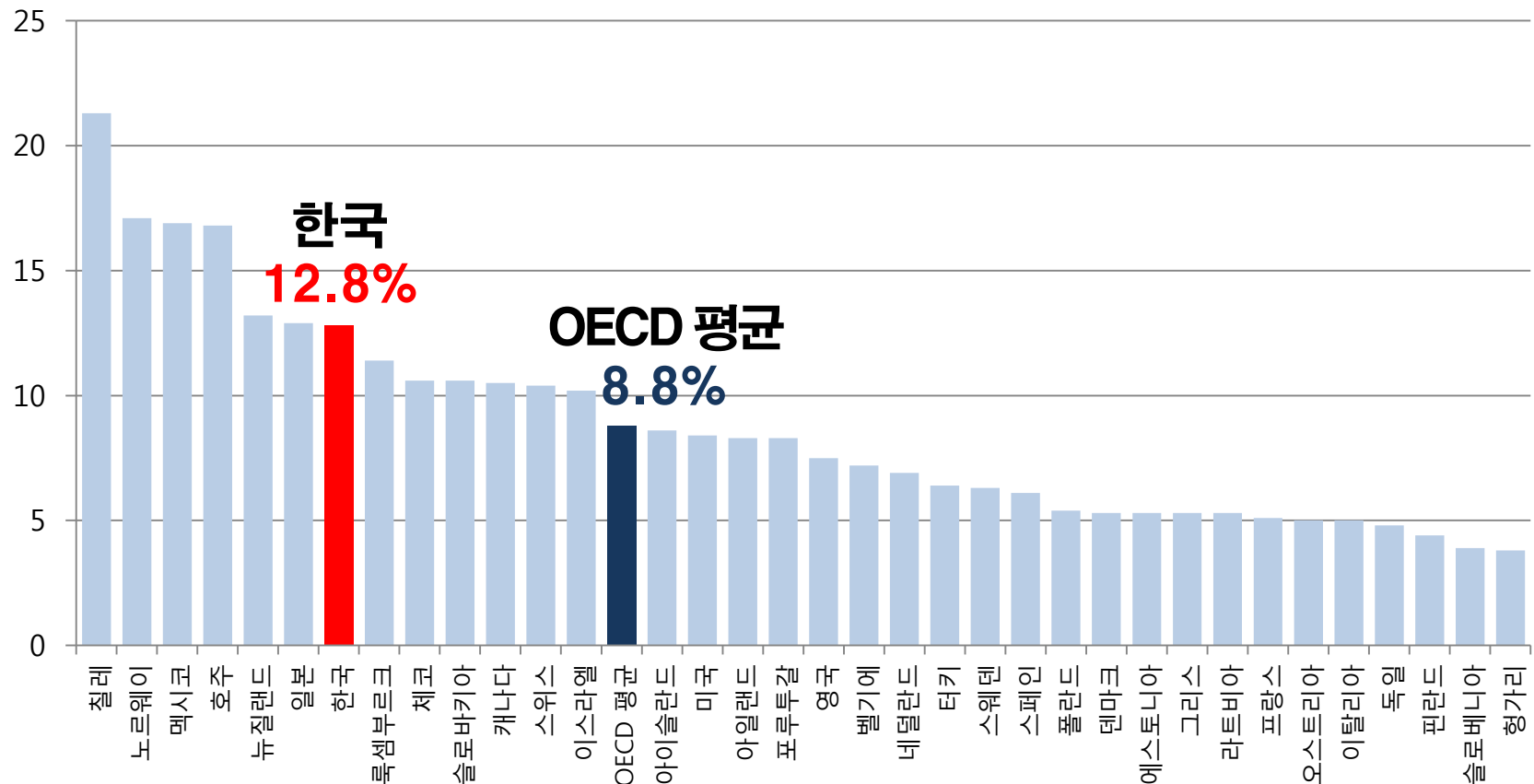
일정수준(23%) 이상의 세율에서는 감소

→ 現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4.2%)은

세수극대화 세율보다 높은 수준

OECD 국가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2014년)

◆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비중 월등히 높음



*총조세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 칠레와 멕시코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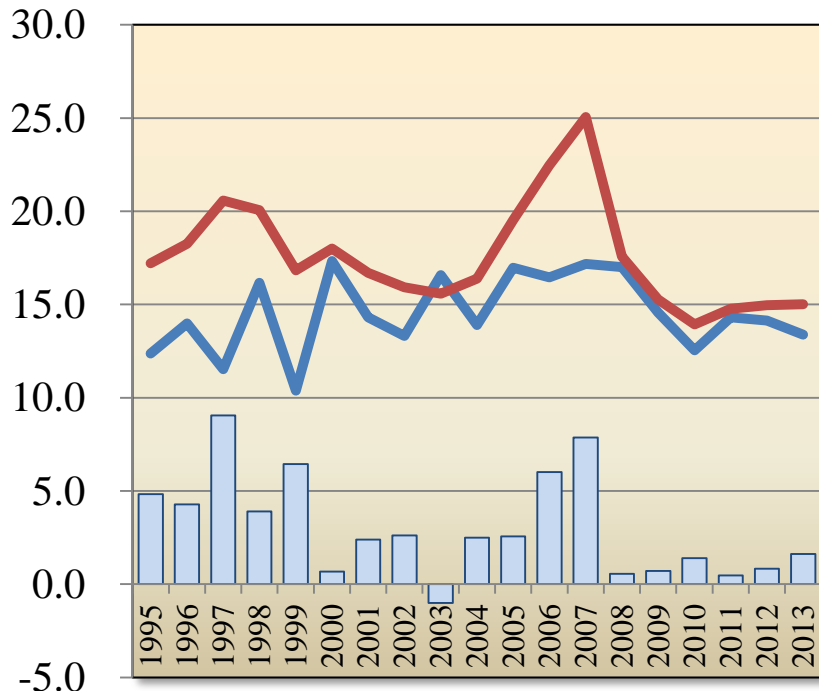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국가별 법인세부담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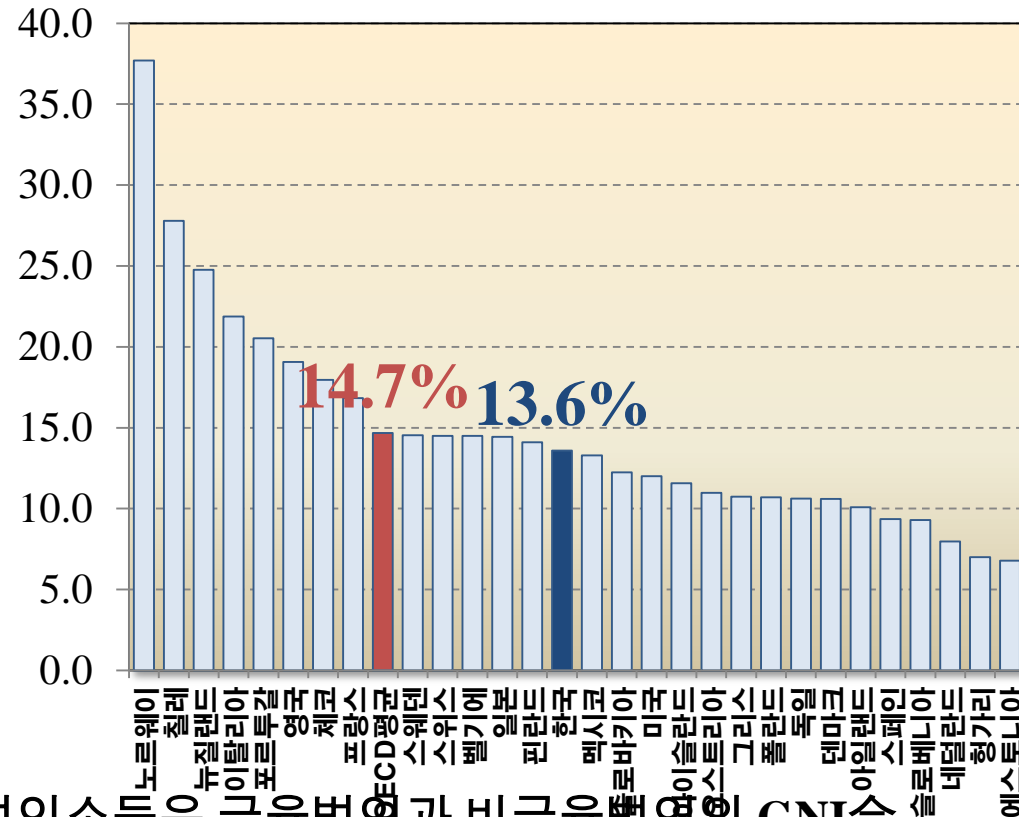
◆ 한국과 OECD간 격차가 점차 축소, OECD 중간 수준

(%) 법인세 부담률 변화추이

차이(B-A) 한국(A) OECD평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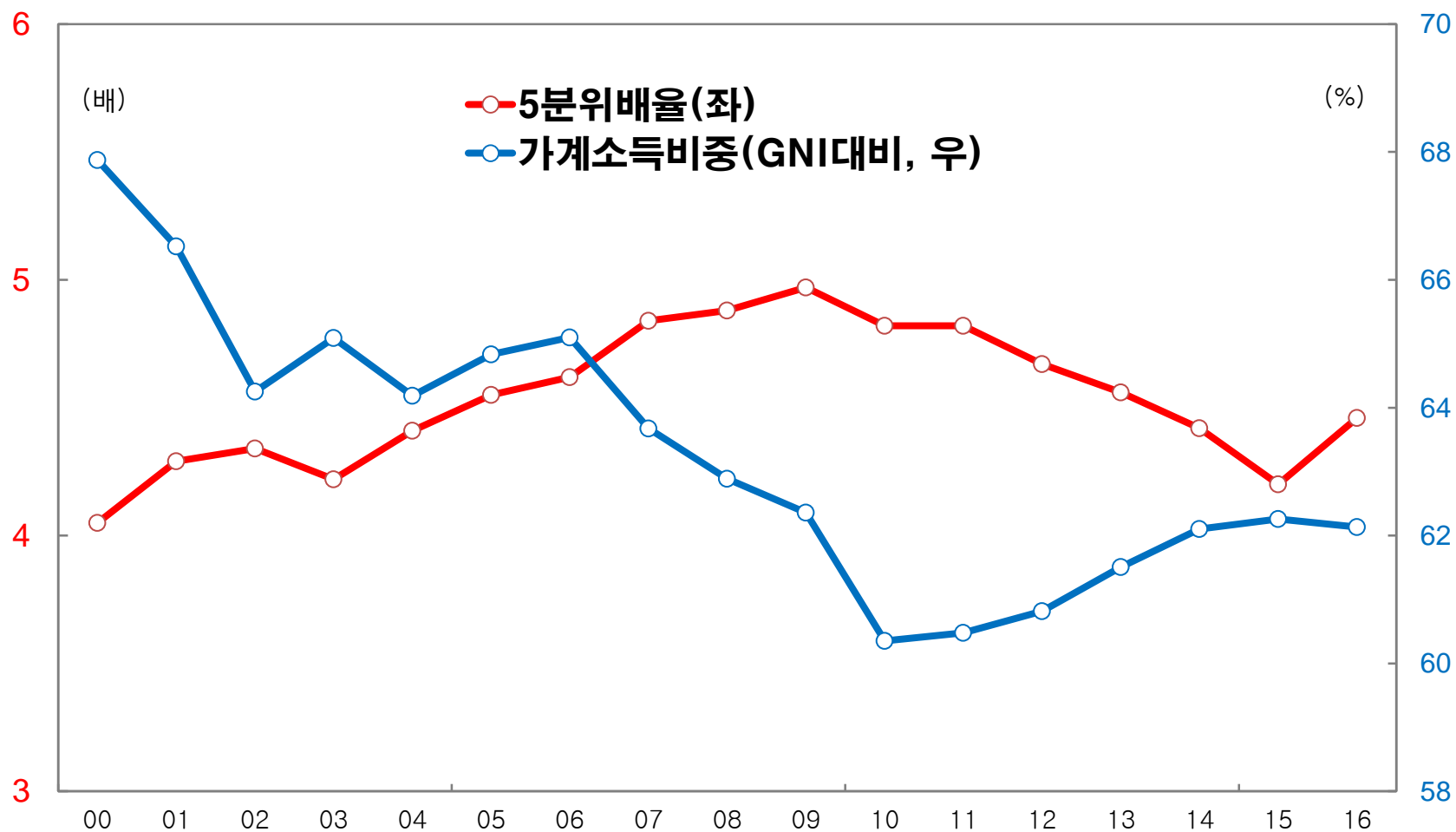
국가별 비교(2010~201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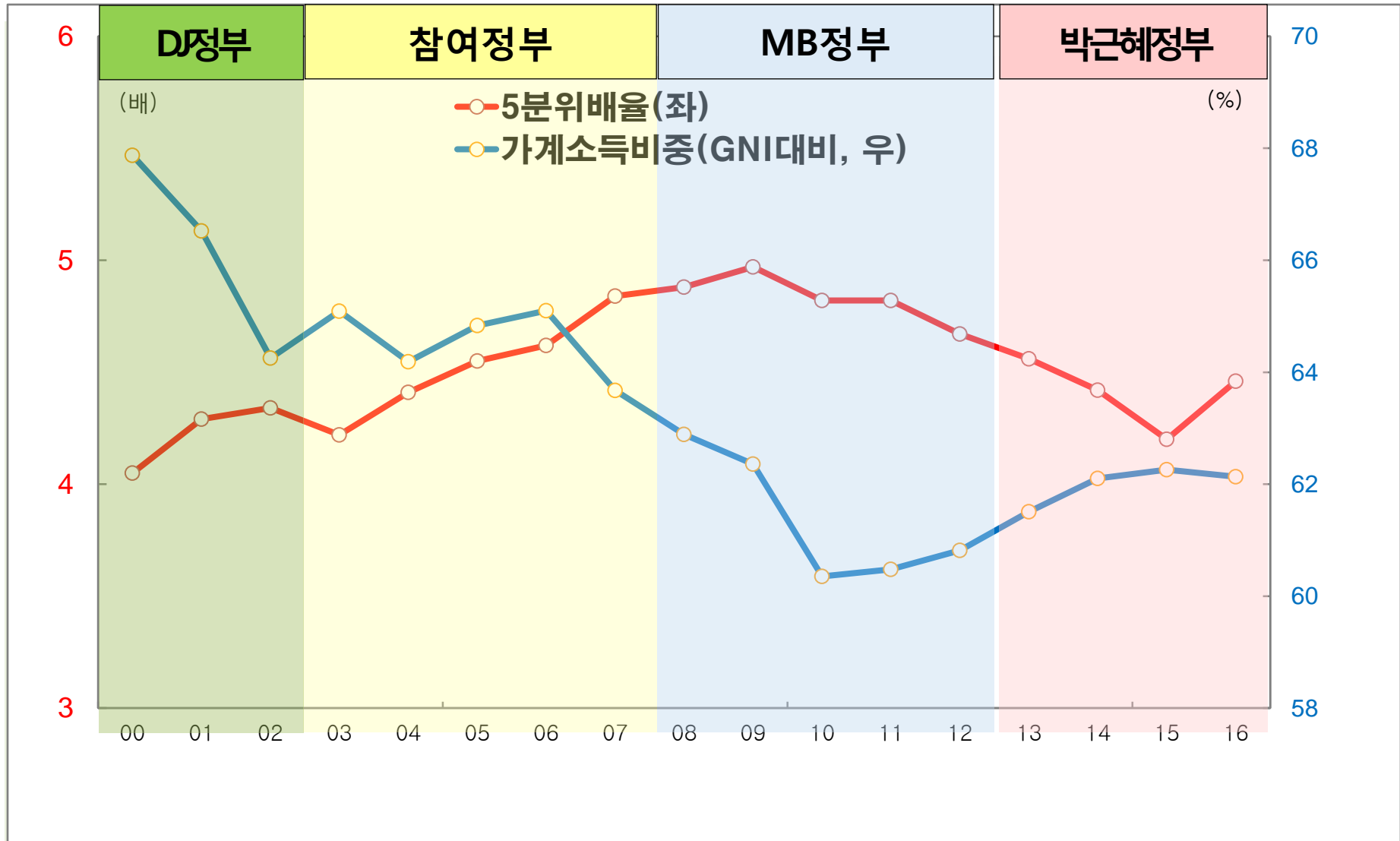
*법인세 부담률=법인세수/법인소득, 법인소득은 금융법인과 비금융법인의 GNI합

*자료 : OECD.Stat(자료가 제공되는 29개 국가 대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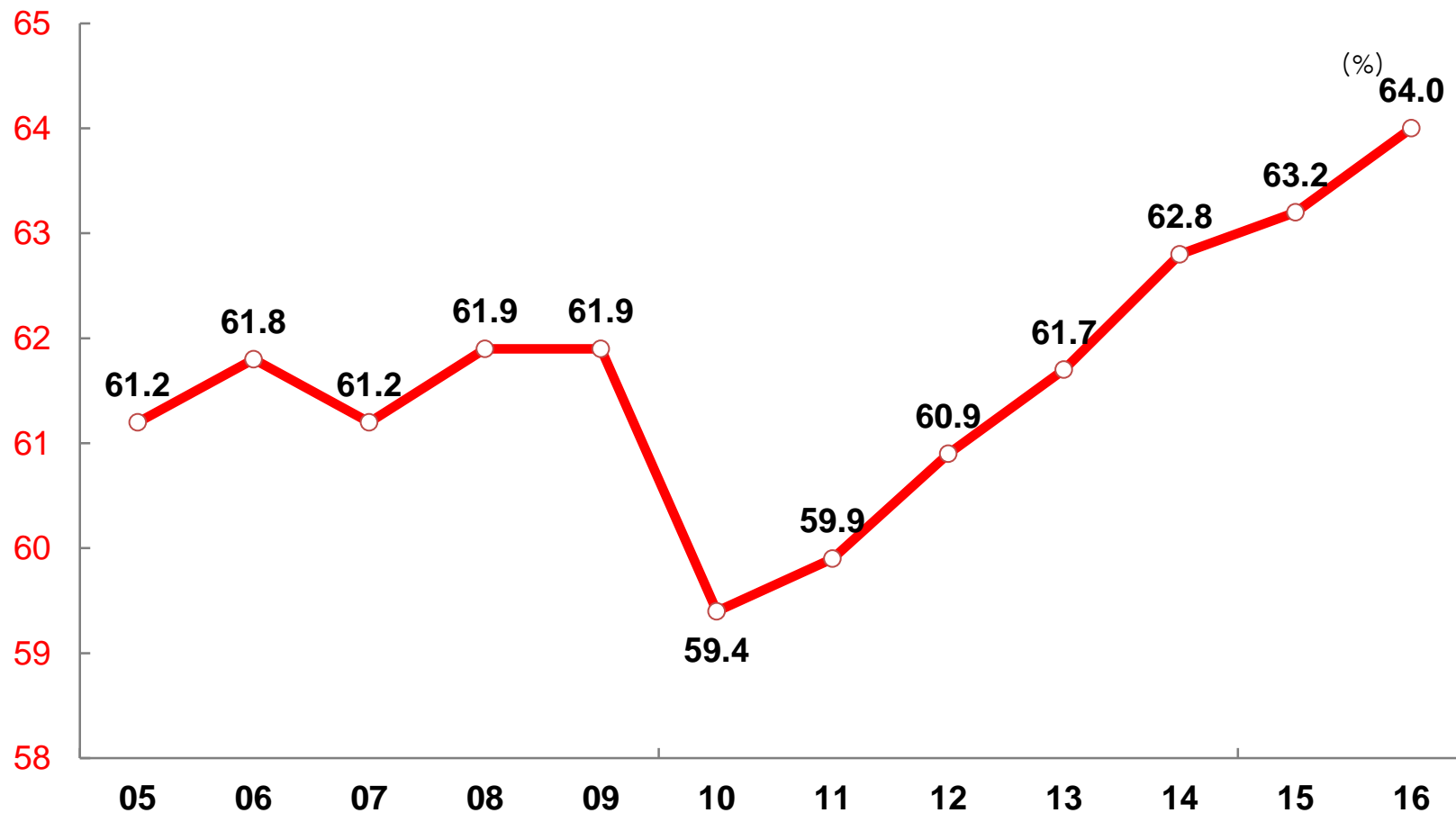
소득분배지표 추이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 10.19)



소득분배지표 추이 (역대 정부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패싱, 기재부 패싱(?) => NO!

- ◆ **탈원전 패싱** : 원전 및 관련산업 일자리 감소, 원전수출 문제
- ◆ **증세 패싱** : 법인세/소득세 인상, 보유세(?)
- ◆ **최저임금 인상 패싱** : 영세 소상공인 부담 과중
- ◆ **부동산정책 패싱** : BH 김수현 사회정책수석 주도
- ◆ **조세제정개혁특위 설치 패싱** : 기재부가 주도하는 것 맞나?
- ◆ **혁신성장 · 4차산업혁명 패싱** :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재부 배제
.
.

2003년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건설공사 중단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

4. 갈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2단계 사업 중 천성산·금정산 공사가 지울스님과의 합의를 통해 2차례 중지(189일)되었다. 중지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착터널 및 교량, 토공 등은 계속 추진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지연된 공기는 추가 작업조의 투입 등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대로 준공·개통함으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하였다. 당시 원효터널을 건설했던 시공업체에서는 직접적인 손실을 145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의 경제·사회적 손실은 약 2조 5천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와 대한상공회의소(2005)는 평가하였다.

1년 정도
공사중단 되었을 때의
경제·사회적 손실
약 2조 5천억 원



2004년 8월 25일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단식 농성중인 지울스님 면담

무책임한 공사중단 결정, 14년 만에 판박이

구 분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신고리 원전 5·6호기
대선공약	2002년 대선 노무현대통령 대선공약 "고속철 천성산구간 노선 백지화"	2017년 대선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공사중단 지시	2003.3.7 노무현 대통령, '공사 전면 중단 및 대안노선 검토 지시'	2017.6.27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 * 714, 한수원 잠정 공사중단 결정
공사중단	195일간 공사발주 중단 189일간 공사 중단 (당시 국토해양부 보고서)	(오늘까지) 98일간 공사 중단
직간접적 피해	2조 5,145억원 (당시 국토해양부 보고서)	1천억원 (협력사 손실비용, 한수원 추정) + α